
이십 세기의 쿠바:

현재의 상황, 불가피한 변화, 가능한 미래

후안 안토니오 블란코

역사학 박사, 현재는 정치분석가이자 마이애미의 데이드 대학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를 향한 새로운 제안을 위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쿠바의 진로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두 가지 보편적인 경고를 남겼다. 첫째, 대답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도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둘째, 지적인 훈련의 효율성은 현실 세계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 수장의 지위를 맡은 이후 쿠바 사회의 진로를 다룬 엄청난 문헌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편찬된 『쿠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쿠바: 21세기 초 발전 전략을 향해』는(Vidal Alejandro y Pérez Villanueva 2012; Miranda Parrondo 2012a) 이러한 경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글에서 많이 인용하려고 한다. 두 책은 실제 쿠바에 대한 분석에 의미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엄밀한 검증은 피하고 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떤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열망하는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이즈음 쿠바 사회

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변화가 불가피한가? 쿠바를 기다리는 실현 가능한 미래는 무엇인가? 이 새로운 시기에 디아스포라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모습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에서 권력과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모델로는 과연 어떤 것이 만들어질 것인가? 실질적으로 쿠바에서 명령을 내리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역할 수행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식의 제도와 자유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쿠바인은 오늘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잘 어우러지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행복을 찾아 나가기 위해 또 다른 통치 체제를 요구하는가? 만일 이 글이 이 모든 질문을 아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쿠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몇 가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쿠바의 경제학자 페드로 몬레알은 현 상황을 예리하게 요약하였다. “쿠바와 같은 경제는 본질적으로 저발전 상태의 경제로, 현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발전 과정은 경제적 완벽주의의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재건이어야 한다”(Tamayo 2008).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 — 그리고 변화 과정 — 이 존재한다.

1. 쿠바는 아직 정보화 시대에 통합되지 못했으나, 영향은 받고 있다.

적절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면(쿠바의 인터넷 접속은 지구 상에서 가장 열악하다), 쿠바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현대의 지식 경제를 향해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Triana Cordoví 2012). 중소기업도 경제력을 갖출 수

없고, 국가 역시 전문가의 물리적인 이동 없이는 서비스를 개발(아웃소싱)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제 도구다. 세계 인터넷 통계(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만 2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39%에 달하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상황에 대한 2010년 연감에서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는 쿠바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초당 95킬로바이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마요트 군도의 초당 56킬로바이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환경이다(Akamai 2011, 9). 그때 이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은 쿠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만 가능한데, 비용은 월 222쿠바 페소로(쿠바 평균 임금의 절반에 근접하는 액수다)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약 9.25달러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 기관은 300~400달러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미국의 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92년 8월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간 이후 ITT(현재의 ATT)는 미국 정부로부터 허리케인으로 손상된 쿠바의 해저 아날로그 케이블 복구와 광케이블 신설을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는 해저 아날로그 케이블의 복구만을 허용했고, 더욱이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다. 최근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일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연장된 광케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설치하는 데는 20년 전 미국 기업이 제 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쿠바는 지금까지도 광케이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Cable óptico" 2012).

식민 시대와 20세기 전반기 쿠바 번영은, 산업 문명의 확장과 관련된 서비스

및 생산 기술의 조기 도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당 공장, 철도, 전화, 텔레비전, 자동차 운송 시스템, 신용 판매, 근대적인 광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진 수단이 카리브 지역 다른 나라보다 쿠바에서 훨씬 빨리 출현하였던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티와 같은 노예 반란이 두려워서 쿠바는 제당 기술 도입을 꺼렸는데, 제당산업이야말로 노예 노동의 임금 노동 전환이 용이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오늘날에는 이집트와 같은 소요 사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쿠바 엘리트는 새로운 정보통신 문화에 통합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문명화 과정의 조기 통합에 대한 거부감은 쿠바를 세계화 과정에서 극단적인 주변부에 머무는, 가난하고 경쟁력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경제 대책이 보여준 소심함보다도 더 심각한—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결과를 야기할— 문제다.

그러나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없더라도 시민운동가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스마트폰, 컴퓨터, 휴대용 메모리)의 지속적인 혁신 앞에서 쿠바의 국가사회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폐쇄된 사회공동체는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재주 많은 쿠바인은 1958년산 자동차를 지금도 굴러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투고자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블로그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블로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요아니 산체스(Yoani Sánchez)가 만든 Y세대다. 이 블로그는 지구 전체에 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쿠바 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형태로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재갈을 물려놓아 들을 수 없었던 배제된 사람들의 외침이 이제 정보통신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2. 반세기 동안 국가의 진로를 결정한 소규모 권력 엘리트는 곧 소멸, 재구성되거나 혁신될 것이다.

엘리트는 소멸될 수도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로 재구성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새로운 의식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엔 혁신될 수도 있다. 쿠바 권력의 핵심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는 소수의 제한된 권력 엘리트에게 있다. 이 권력 엘리트 구성원은, 만일 5년 내에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젠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층 읍서버들은 당 고위직, 장관,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권력 엘리트 구성원이라고 오판하고 있으나, 실제 권력 엘리트는 소수의 역사적인 지도자¹⁾로 구성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위 공무원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및 마찬가지로 일회용 관리자로서 기능할 뿐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념, 즉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통치를 하는 사람(Who rules? Who governs?)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젊은 간부진(공무원으로서 통치는 허용하지만 권력 엘리트 구성원처럼 명령할 권한은 없다)에 대한 오랜 두려움은 성공적인 지도부 교체에 장애가 되었다. 승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도였다.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도자는 이미 노령화되었다. 지금 이 순간 교체 요원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채석장은 가까운 가족(이는 엘리트층 내에서도 긴장을 야기할 것이다), 행정부나 당 간부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1) 쿠바혁명의 지도자를 일컫는다 — 율킨이.

3. 경제의 국유화 시스템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이제는 유익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은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1년 쿠바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은 카리브 해 지역의 평균 증가율인 4.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였다. 고정자본형성 비율도 카리브 해 지역은 보통 23%인 데 비해 겨우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Vidal Alejandro y Pérez Villanueva 2012, 14). 현재의 축적 수준(국내총생산의 10~15%)은 고정자본 회복에 필요한 하한선에 근접해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25~30%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Díaz Fernández y Torres Pérez 2012, 30).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서비스가 생활 수준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불충분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2) 농업과 공업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 3) 총유효수요가 부족하다. 4)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제한적이고, 재정이 불충분하다. 5) 쿠바의 국제사회 진입이 불완전하다. 6) 사업을 추진할 때 쿠바 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Miranda Parrondo 2012b, 192).

국유화된 경제 체제는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방법과 강력한 보조금 정책,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본 수혈이 없다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은 오늘날 베네수엘라로부터 오고 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절름발이 경제(economía disfuncional)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떠맡지 않을 것 같으며, 지금부터 수개월 내에 베네수엘라로부터 대규모로 이전되는 자원은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엠바고가 존재하고 쿠바가 국제금융 제도권 밖에서 머무는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원천에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쿠바의 탈자본화(descapitalización)가 계속되고 있다("Cuba ve"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현 시스템에서 국내 생산력 발전에 저해가 되는 또 다른 앰바고, 해외 거주 쿠바인(díaspóra)의 투자 제한이라는 국내의 앰바고를 철회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 부문이 재형성되어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고용과 생산 그리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화 경제의 비효율성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신용서비스협동조합과²⁾ 농민의 사유지는 경작지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체 식량 생산량의 57%를 생산하고 있다(Novoa González 2012, 136). 이로 인해 쿠바는 세계 시장의 식량 가격 상승에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더욱이 수입 식량의 80%는 앰바고로 인해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4. 수십 년 동안 시민 합의의 토대가 되어온 쿠바의 사회 시스템은 이젠 더 이상 지탱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개혁해야 한다.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분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통치 체제가 권력 자원과 권력 공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떠한가? 어떤 정치 시스템 그리고 어떤 계급이 이를 촉진할 것인가? 체제 이행이 시작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신용서비스협동조합(CCS: Cooperativas de Créditos y Servicios)은 개인 소유의 소규모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1960년대 결성한 협동조합이다 — 옮긴이.

사회보장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재정 위기로 인해 추락하게 되었다. 많은 서비스와 국가보조금이 최근 6년 동안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정부는 다음 삼 년 동안(2012~2015) 국가 부문에서 13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급자족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정책으로 평형추를 맞추지 않는다면, 소득 불평등은 새로운 경제 조치들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쿠바의 여성 사회학자인 에스피나 프리에토는 이렇게 확신한다.

일반적으로 [공산당의] 근본 특징은 불평등과 빈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공평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Espina Prieto 2010, 160).

지니계수가 1980년대의 0.24를 지나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는 0.38까지 상승하였다(Espina Prieto 2010, 165). 해외 송금 유입과 관광산업을 통한 달러에 대한 접근, 사기업은 전에 없는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쿠바 페소와 태환 페소(peso convertible)라는 이중 통화 정책과 결합함으로써 지니계수는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한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월 70달러 이하를 빈곤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데, 쿠바인의 평균이 이 선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황은 무척 심각하다. 2011년 실질 임금은 1989년의 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dal Alejandro y Pérez Villanueva 2012, 9). 여기에 배급카드가 무게를 잃고, 점차 기초 생필품조차 태환 화폐(대략적인 환율은 20페소 정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해진다면, 임금의 구매력 하락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긴장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51%가 구매력 하락을 쿠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IRI 2012).³⁾

새로운 조치들은 특히 과부, 노인, 아프리카계와 같은 취약 계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의 상황은 2000년 이래 더욱 악화되었다. 2004년에 실시된 연구는 고등교육에서 백인 학생의 과잉 비율을 보여주는 반면에 아프리카계는 수형자에서 과잉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2004년에 입학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1만 3,301명인데, 이 중 68%가 백인이었고, 아프리카계는 9%, 메스티소가 23%였다(Espina Prieto 2010, 169). 이것이 인구의 반 이상이 메스티소와 흑인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보장 역시 쿠바의 인구 통계가 보여주는 경향, 다시 말해서 낮아진 인구 성장률과 확인해진 노령화로 인해 악화되었다. 2006~2010년 사이의 인구는 2009년과[sic] 비교해 감소하였다. 60세가 넘는 쿠바인이 2011년에는 전체의 18%였다(OENI 2012).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구는 겨우 7만 182명 늘었을 뿐이다.

3) 쿠바인들의 여론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쿠바 공산당이 때문이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는 쿠바에서 비합법적인 여론 조사를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수치에 수용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표는 자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하긴 하지만, 현재 쿠바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여론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쿠바인 방문자들이 쿠바에서 간파할 수 있는 정신 상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5. 디아스포라 배제 정책과 쿠바 사회의 초국가적인 상황 사이에서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쿠바 정세와 이민 정책으로 엄청난 양의 인적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었고,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200만 명 이상 되는 해외 거주 쿠바인)의 쿠바 경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쿠바인의 이주를 통제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출입국 허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정착한 쿠바인의 귀환을(관광객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인은 계속해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국가로 이민을 가고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일 년에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불법 이민자와 다른 경로를 선택한 사람도 덧붙여야 한다. 현재의 쿠바 정책은 해외 거주 쿠바인과 협력을 촉진하지도 못하면서, 현재 국내 거주 쿠바인의 유출도 막지 못할 것이다. 2012년 10월에 발표한 개혁 조치도⁴⁾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허가 기간, 세율 문제, 인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민 정책의 “현실화”는 경제 조치만큼이나 불충분하다.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는 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낭비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합한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망만 야기하고 있다. 쿠바 인구의 8.1%(노동자의 15%)의 학력은 대학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최고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Díaz Fernández y Torres Pérez 2012, 30).

현재 이민은 인구증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4) 2012년 10월 16일 쿠바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했다. 1961년부터 시행하던 자국민 출국 허가증은 2013년 1월 14일자로 폐지하고, 해외 체류 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했다 — 옮김이.

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는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을 다루고 있는 특별 보고서 '21세기 쿠바 출신의 디아스포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필자가 참여하였으며, 아바나 대교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를란도 마르케스를 포함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룹이 작성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쿠바가 인간·경제·사회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디아스포라가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흥 민간 부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민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Cuban Research Institute 2011).

6. 사회적 긴장과 의견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쿠바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평화적인 문화와 민주적인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

정치 개혁이 없이는 경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현실에서 적실성을 지니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Espina Prieto 2010, 160).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결합된 민주적인 제도와 가치를 추구하는 체제만이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쿠바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는 상이한 의견을 배제하고 억압한다. 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막는다. 만일 쿠바의 시스템이 기본적인 전제를 수용하는 학자들 사이의 토론 공간마저 포기한다면, 전문가와 공무원의 교류는 형식적인 수밖에 없다.

상이한 의견을(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닌 사람과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포기했다.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에 불관용을 높게 평가하고 강제를 선호하는 정치적인 문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맥락

에서 ‘평화 펀드’(Fund for Peace)라는 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실패국가 지수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실패국가 지수는 최하 1점(소말리아처럼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아주 부족한’ 국가)에서 최고 5점(캐나다처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훌륭한’ 국가)까지 나뉘는데, 2012년 쿠바는 2점(‘낮은’ 평점)을 받았다. 물론 낙관적 이기는 하지만,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쿠바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기는 하다(Fund for Peace 2012, 43).

7. 쿠바는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쿠바에서는 이런 농담이 떠돌고 있다. 외국인 신문기자가 쿠바인에게 1959년 이후 가장 중요한 업적 세 가지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쿠바인은 이런 대답을 하였다. ‘건강, 교육, 체육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악으로 실패한 세 가지는 무엇이나고 묻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 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쿠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체는 위의 세 가지 실패와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실패로 쿠바는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한 세 가지 업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뿐만 아니라,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이 존재하므로 정보 문명의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쿠바의 발전과 미래 번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 국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 모두가 주목할 만한 인간·경제·사회 자본을 갖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거주 쿠바인 모두가 협력하여 쿠바가 세계화 과정에서 진입하도록 하려면 배제와 추방을 규정한 법률 및 현 거버넌스 체제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 쿠바의 지리적 위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장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와 협력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매력적인 장소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소위 구 모델의 ‘현실화’가 민주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길을 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가 공식적인 첫 번째 임기를 마치는 2013년, 반세기 이상 차지한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정상화는 매우 쉬워질 것이다.

쿠바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 쿠바 정부가 채택한 여러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않다. 소위 사회주의 모델의 ‘현실화’에 대한 토론에서 몇몇 발제자들은 라울 카스트로의 주도 아래 채택된 개혁 조치를 열거하고 장점을 강조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렇지만 갈릴레오의 말처럼 쿠바에서도 뭔가가 “돌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뿐만 아니라 효과도 불충분하다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채택된 개혁 조치의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이미 노출된 비효율성과 연계된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제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쿠비는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목표와 조치(과감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를 정직하게 실천하려면 정부의 선전 책동은 중단해야 한다.

— 현재 쿠비는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기술적 속박으로

부터 벗어나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보 문명에 참여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에 합류해야 한다.

— 쿠바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 강력한 시민 통제 아래 —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쿠바는 세계화 과정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 쿠바의 미래는 러시아처럼 권력을 전횡하고 부패한 시스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시장 스탈린주의’(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인 독재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어도 시스템은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반노예적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 새 천 년에 진입하는 방법이나 사이버 문명의 세계화에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쿠바의 가능한 미래 — 번영 또는 궁핍 — 역시 여러 가지다.

—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희망의 미래를 아무런 폭력 사태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폭발의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무력으로 억압할 수 있다는 생각(‘바스티온 2009’ 군사 훈련의 가정이기도 하다)은 위협한 환상이다(Arreola 2009).

언제나 합의를 통한 출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공간이 없다면 미래는 비관적일 것이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는 존재하는 것이다. 쿠바 정부는 이미 서명한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여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치에서 대화와 합의를 위한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은 폭력으로 통하는 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쿠바 엘리트는 기존 관념을 바꿀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 혁신을 거부하므로 시급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는 과연 어떤 사회가 남을 것인가?

새로운 문명화 과정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 황폐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만 남아 있으며 자금도 부족한 국가, 그 어떤 발전 전략도 불가능한 성장 지표를 보여주는 국가, 낡은 전체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을 이미 상실한 국가,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문화와 제도가 없는 가난한 국가, 법률 전통이 미약한 국가, 전 사회가 부패한 국가, 무기를 다루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직업도 불가능한 수많은 전직 군인의 국가, 쿠바인의 디아스포라가 지닌 인간·경제·사회 자본의 잠재력과 분리된 국가,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장과 1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가.

쿠바의 엘리트는 자신들만이 실패한 국가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시대에 뒤진 ‘현상 유지’ 논리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민주적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적절하면서도 비폭력적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내일의 평화와 지역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다.

8. 결론을 대신하여

어두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희망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번 5년 임기에 결정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 쿠바 사회의 두 가지 가능한 미래다.

IRI가 쿠바 내의 14개 지방에서 787명의 쿠바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쿠바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4%만이 미국의 엠바고라고 대답했다. 이는 라울 카스트로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쿠바 정책 다음으로 관료주의적인 경향을 비판한 다음이라서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대다수는 평가절하된 임금, 부족한 식량과 같은 국내 문제라고 대답했다. “현 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19%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필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수의 답변에 동의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_ 남진희 옮김

원제와 출처

Juan Antonio Blanco. 2012.

“Cuba en el siglo xxi Escenarios actuales, cambios inevitables, futuros posibles.”

Nueva Sociedad 242: 56~69.

참고문헌

- Akamai. 2011. The State of the Internet. Akamai Technologies, Inc. 4th Quarter, 2010 Report, 3(4).
<http://i.zdnet.com/blogs/akamai042611a.pdf>>
- Arreola, Gerardo. 2009. “Bastión 2009, los juegos de guerra de mayor envergadura en Cuba.” *La Jornada*, 26 de noviembre.
www.jornada.unam.mx/2009/11/26/index.php?section=mundo&article=024n1mun
- “Cable óptico Venezuela y Cuba: operativo pero no funciona.” 2012. *Hoybolivia.com*, 25 de mayo.
www.hoybolivia.com/Noticia.php?IdNoticia=61241
- “Cuba ve ‘volar’ el dinero extranjero.” 2012. *AmericaEconomica.com*, 25 de mayo.
www.americaeconomica.com/index.php?noticia=13126&name=MERCADOS%20FINANZAS
- Cuban Research Institut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2011. “La diáspora cubana en el siglo XXI.” Julio de 2011.
http://diasporaydesarrollo.com/index.cfm/files/serve?File_id=7f8c0225-7d1c-4f2d-a47f-27d682d0142d
- Díaz Fernández, Ileana y Ricardo Torres Pérez. 2012. “Los encadenamientos productivos: un análisis para Cuba.” En Pavel Vidal Alejandro y Omar Everlency Pérez Villanueva, comps. *Miradas a la economía cubana: el proceso de actualización*. La Habana: Caminos.
- Espina Prieto, Mayra. 2012. “Retos y cambios en la política social.” En Mauricio de Miranda Parrondo, comp. *Cuba. Hacia una estrategia de desarrollo para los inicios del siglo XXI*. Bogotá: Universidad Javeriana.
- Fund for Peace. 2012. “Failed States Index 2012.”
www.fundforpeace.org/global/library/cfsir1210-failedstatesindex2012-06p.pdf
-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2012. “Encuesta de opinión pública cubana.” 29 de febrero - 14 de marzo, 2012.
<http://www.iri.org/news-events-press-center/news/iri-publica-los-resultados-de-la-encuesta-de-opini%C3%B3n-p%C3%ABblica-cubana>
- Miranda Parrondo, Mauricio de, comp. 2012a. *Cuba. Hacia una estrategia de desarrollo para los inicios del siglo XXI*. Bogotá: Universidad Javeriana.
- Miranda Parrondo, Mauricio de. 2012b. “Los problemas actuales de la economía cubana y las reformas necesarias.” En Mauricio de Miranda Parrondo, comp. *Cuba. Hacia una estrategia de desarrollo para los inicios del siglo XXI*. Bogotá: Universidad Javeriana.

- Novoa González, Armando. 2012. “La propiedad en la economía cubana. Recientes cambios en las formas de propiedad y su impacto en el sector agrícola cubano.” En Pavel Vidal Alejandro y Omar Everlency Pérez Villanueva, comps. *Miradas a la economía cubana: el proceso de actualización*. La Habana: Caminos.
- ONEI(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ación de la República de Cuba). 2012. *Anuario Estadístico de Cuba 2011*. <http://www.one.cu/aec2011.htm>
- Tamayo, Juan O. 2008. “Economista Pedro Monreal Back in the News.” *Cuban Colada, blog de The Miami Herald*.
http://miamiherald.typepad.com/cuban_colada/2008/04/economist-pedro.html
- Triana Cordoví, Juan. 2012. “La economía del conocimiento y el desarrollo.” En Mauricio de Miranda Parrondo, comp. *Cuba. Hacia una estrategia de desarrollo para los inicios del siglo XXI*. Bogotá: Universidad Javeriana.
- Vidal Alejandro, Pavel y Omar Everlency Pérez Villanueva, comps. 2012. *Miradas a la economía cubana: el proceso de actualización*. La Habana: Caminos.